

가정복지국
기능 미흡

여성정책 전담기구로 '담당관제' 도입해야

여성개발원 주최 <한독세미나>서 김선욱 연구원 주장



총괄적 의미의 여성정책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은 현행 가정복지국·과의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방행정조직에 '여성정책 전담기구'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이는 지난 17~18일 한국여성개발원(원장 김윤덕)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<한·독 여성정책 세미나>에서 발표돼 지자체 실시와 발맞춰 큰 관심을 끈다. 통독이후 처음 가진 한독세미나는 여성개발원이 지난해 9월부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공동진행한 <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>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.

독일의 평등지위 담당관제도와와의 비교연구로 '한국의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과 방안'을 논한 김선욱(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) 씨는 "현행 지방의 가정복지국·과는 그 설치목적이 여성정책에 있기보다 요보호 여성중심의 가정복지차원으로 여성의 가정내 역할이 강조되는 등 여성정책과 배치되는 큰 한계가 있다"며 새로운

행정기구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. 김 씨는 "특히 가정복지국·과의 기능은 여성단체 지원사업의 경우, 각 단체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력을 갖추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정부시책 실현을 위한 활용에 더 관심이 있어 성차별제도의 개선이라는 종합적 여성정책과는 다른 업무가 되고 있다"고 지적.

김 씨는 "이처럼 우리의 여성 관련 행정기구가 수행하는 업무의 미흡은 독일 평등지위 담당관제도의 역할과 비교할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"고 설명하고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△행정내부와 대주민관계에서의 역할과 △지역의 정책적 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의 '평등지위 담당관' 같은 제도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. 단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행정기구가 설치될 경우 "현행 가정복지국·과의 경합이 아닌 현재 기구의 '기능강화'로 보완돼야 할 것"으로 제안됐다.

김 씨는 전담기구의 설치방안을 논하면서 "여성정책은

일방적인 권력행사를 통한 정부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공동의 과제라고 볼 때 모든 지방행정조직, 지역주민, 지역의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의 협력보장과 공동작업의 강화가 요구된다"며 여성정책과제에 적합한 유연성을 갖는 '비관료주의적 조직구조'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. 따라서 여성정책은 발전적 사고를 막는 관료제내의 전통적 사고에 개혁

을 이뤄야 하는 과제의 성격상 국·과 등의 개선조직보다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'담당관제도'가 더 적합하다는 것.

담당관제도는 위계적 개선조직에 대한 단순한 보조지원이 아니라 연구, 분석, 조사, 계획입안, 평가 및 행정개선 등에 대해 개선조직을 보좌하고 이 조직의 움직임에 활력소를 부여하는 '동태적 조직'으로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에도 이 제도의

설치근거가 규정돼 있다.

이 논문에서 제안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방안은 △지방자치 단체장 직속의 평등지위담당관 △국 또는 과에 설치하거나 별개의 국으로 설치하는 제도 △의회안에 설치하는 형태 △행정부내와 의회에 각기 설치되는 혼합형태 등 4가지 안이다.

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담당관제는 중요 관할영역에 매이지 않고 모든 여성정책을 총괄하며 행정수반의 업무감독에 있다. 그러나 긴 결재라인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 업무수행이 최대 장점. 반면 국이나 과 또는 별개로 설치되는 안은 어느 부서의 국장이 동시에 담당관의 업무를 부과하거나 국장 부속으로 담당업무를

두기에 관료제적 형태를 띠고 결재라인이 길어지는 등 제한된 업무권한을 갖게 된다. 의회설치 형태는 정치적 중요성은 크나 행정영역에서는 권한이 적은 단점이 있고 혼합형태는 행정부내 담당관을 설치하고 의회에도 여성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협조 지원하는 형태.

김 씨는 "신설될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지위는 자치 단체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여론이 많았다"고 소개하고 중앙의 정부2장관실과의 연계를 통한 유기적 관계속에서 공동작업이 병행되면 여성정책의 수행은 성공적일 것으로 내다봤다.